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

2025. 8. 6.(수)

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확대 등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추진

- 복지부, 17개 시·도 보건국장과 지역 자살예방대책 논의 -
- 지역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현장컨설팅 등 강화 추진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8월 6일(수) 오전 10시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·도 보건국장들과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 지역에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.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-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,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,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,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,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:1 맞춤형 멘토링,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,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,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했다.

한편,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.

보건복지부는 2차 추경을 통해 55개 시·군·구에 추가 국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, 현재 총 14개 시·도 79개 시·군·구에서는 읍면동 단위 민간(약국, 병원, 종교단체), 이·통장, 부녀회, 상인회 구성원들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자살 고위험군 발굴·지원, 인식개선, 가정방문 및 말벗서비스 제공, 자살 다빈도 장소 점검 등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

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대면 대책회의 및 컨설팅(이하 ‘컨설팅’)을 제공하고 있으며, 기존 월 1회 시행해 오던 것을 7월부터는 월 4회 실시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.

컨설팅에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자살예방 관련 유관기관, 민간단체, 주민조직 구성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자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·수행하게 된다. 최근 실시된 컨설팅에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과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, 소방서, 지역 병원, 사회복지관,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여 곳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지역 특화전략 수립에 힘을 기울인 바 있다.

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“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살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으며, “복지부는 앞으로도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,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참고 사진

담당 부서	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우 (044-202-3890)
		담당자	사무관	장을진 (044-202-3892)
		담당자	사무관	정구영 (044-202-3891)

〈사진 1〉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



〈사진 2〉 농약안전보관함 현장점검

